

호남정치, 세대·성별 대표성 확장 여전히 한계

6·3 지방선거 결과 (3) 청년·여성 성적표

오는 7월 출범하는 전남과 광주특별자치시 지역은 여전히 남성 중심의 5060세대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선인 대부분이 40~60대 중장년층이었고, 2030 청년 당선인은 5명에 그쳤다.

10일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분석한 결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당선인(비례대표 포함) 91명 중 20~30대 청년 정치인은 5명(5.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국 평균인 8.3%를 밑도는 수치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1위이다. 서울(18.6%)과 인천(15.6%) 등 수도권과 비교하면 격차가 두드러

광역의원, 청년 당선인 5명 그쳐... 40~60대 85명 집중
여성, 기초의회 중심 확대... 육성 시스템 강화 목소리
“지역 청년 인재 발굴·공천기회 확대 등 방안 모색”

졌다.

연령별로 20대 1명(1.1%), 30대 4명(4.4%), 40대 21명(23.1%), 50대 36명(39.6%), 60대 28명(30.8%), 70대 1명(1.1%)으로 집계되면서 전체 당선인의 93.4%인 85명이 40~60대에 집중됐다.

청년 당선인은 강성찬(민주당·목포2), 노진성(민주당·광주 동구2), 장성혜(조국혁신당·비례), 박민영(민주당·비례), 박진한(민주당·비

례) 등 5명이었다.

특히 지역구 기준으로는 통합특별시의회 70개 선거구 가운데 목포2와 광주 동구2 등 단 2곳에서만 청년 정치인이 당선됐다. 나머지 68개 선거구에서는 청년 당선인을 배출하지 못했다.

이 같은 현상은 기초의회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광주지역 기초의원 당선인 73명 중 청년 정치인은 6명으로 8.2%를 차지했고, 전남은 247명 중

11명으로 4.5%에 그쳤다. 전남에서는 20대 당선인 1명과 30대 당선인 10명이 의회 입성에 성공했다.

반면 여성 정치인의 진출 폭은 기초의회를 중심으로 넓었다.

통합특별시의회 당선인 91명 가운데 여성은 26명으로 전체의 28.6%를 차지했다. 광주·전남 기초의원 당선인 320명 중 여성은 116명으로 36.25%를 기록했다.

광주 기초의회의 경우 당선인 73명 중 여성 의원이 40명(54.8%)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전남은 247명 중 76명(30.8%)이 여성 당선인으로 집계됐다.

여성 정치인이 증가한 것은 비례대표 확대와 기초의원 여성 진출 증가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광주 기초의회 여성 비율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위였으며 전국 평균보다 20%p 가까이 높았다.

이처럼 청년 정치인의 진출과 생활정치 중심의 기초의회에 여성 정치인이 집중돼 있는 점으로 미뤄봤을 때 지방권력 전반의 세대·성별의 대표성 확대가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으로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지역 정치에서는 정당 차원의 청년·여성 정치인 육성 시스템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광주지역 한 기초의원은 “각 정당이 청년과 여성 정치인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지만 실제 당선으로 이어지기에 한계가 있다”며 “지역 정치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청년 인재 발굴과 공천 기회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당선인이 10일 광주 북구 오치동 광주교육연구원에서 열린 '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 출범식에서 김경범 위원장을 비롯한 준비위원들과 현판식을 갖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통합특별시교육, 대체 불가 ‘K-교육’ 모델 만들 것”

김대중 당선인 인수위 ‘K-교육특별시 준비위’ 출범 통합·AI·자율분권·메가시티 교육 등 4개 분과 활동

전남·광주 교육 통합의 청사진을 그린 '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가 10일 공식 출범했다.

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을 앞두고 구성된 준비위는 AI 기반 교육혁신과 자율분권, 메가시티 교육체계 구축 등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미래교육 모델 설계에 착수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번 통합이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 교육 혁신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주목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이날 광주시교육청교육연구원에서 '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당선인과 준비위원, 실무위원 등이 참석해 통합교

육청 출범을 위한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행사에서는 통합교육 비전을 담은 현판 제작과 함께 준비위원 12명, 실무위원 94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가 진행됐다.

준비위원회는 김경범 위원장을 중심으로 △통합교육기획 △AI교육대전환 △자율분권교육 △메가시티교육 등 4개 전문위원회 체제로 운영된다.

각 분과는 통합교육청의 조직과 정책, 미래교육 비전 수립을 맡아 오는 7월 말까지 실행계획 마련에 집중할 예정이다.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시민소통위원회도 별도로 꾸려진다.

시민소통위원회에는 학부모와 대학생, 시민사회, 대학,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 다양한 분야의 구성

원이 참여하며, 다음 주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준비위는 광주와 전남의 균형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이원화 체제로 운영된다.

광주분부는 광주시교육청교육연구원에, 전남분부는 무안 남야의 전남교육정책교육센터에 각각 설치돼 지역별 현안을 반영한 정책 개발을 지원한다.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당선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에 대한 관심은 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AI 시대 대한민국 교육을 대표할 수 있는 대체 불가능한 K-교육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경범 위원장은 “통합특별시 교육이 대한민국 미래교육의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준비위원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며 “정책과 비전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투표지 사태 국조요구서 국회 보고 여야, 범위·방법·기간 등 놓고 조율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1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10일 이 같은 내용으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이어 특위 구성 내지 상임위 회부, 조사계획서 성안, 조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실시된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8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6·3 지방선거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및 경찰 폭력진압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두 당은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국조 대상 및 국조 특별위원회 운영 방식 등을 놓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신수정 복구청장 당선인, 청년 목소리 청취 청년 창업가 등과 공감 토크... 애로사항 정책 반영

신수정 복구청장 당선인(사진)이 인수위원회(주민주권 으뜸복구 준비위원회) 출범 이후 첫 현장 행보로 청년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10일 신수정 당선인 인수위에 따르면 신 당선인은 전남 북구행복어울림센터 내 청년로컬크리에이터라운지, 청년어울림을, 광주청년일자리스테이션 옹보 등 방문해 청년 지원 현황을 살피고, 청년 창업가와 취업준비생 등 20여명과 '복구 청년 공감 토크'를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민선 9기 복구의 핵심 과제인 '청년 기회도시 복구'를 인수위 단계부터 현장 중심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 당선인은 청년 창업·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확인한 뒤, 청년들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과 정책 제안을 경청했다.

청년공감 토크에서는 창업 초기 판로 확보, 청년 일자리의 실무경험 부족, 지역 기반 콘텐츠 개발, 청년 커뮤니티 공간 확대, 청년 정책 참여 구조 마련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신수정 당선인은 “청년 정책은 청년 없이 만들 수 없다”며 “복구에서 첫 걸음을 뚫고, 첫 창업을 시작하고, 첫 보금자리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청년의 사회 진입과 지역 정착을 함께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대학생 타운을 통해 더 많은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공약 실행계획에 반영해 청년이 떠나지 않는 복구, 청년이 다시 선택하는 복구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청년기회도시 복구'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청년 취·창업 첫걸음 보장제 도입, 공공기관 및 AI·미래전략산업 분야 인턴십 확대, 복구형 청년정책 랩 구축·운영, 청년 정책·지원금·일자리 통합 플랫폼 운영, 창업과 주거가 결합된 스마트 워크 스테이션 조성 등이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첨단 정보통신기술 융합 산업... 국가 차원 육성”

정진욱, '에듀테크산업 진흥법' 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사진)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에듀테크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에듀테크(교육정보기술) 산업 진흥법' 제정안(현행 이라닝 산업 발전 및 이라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진욱 의원은 “글로벌 에듀테크 시장은 가파르게 성장해 2030년 약 800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대한민국 에듀테크 산업도 차세대 핵심 수출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이번 법안은 에듀테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가상·증강현실 등 첨단 기술이 교육과 결합하면서 에듀테크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생성형 AI의 확산은 맞춤형 학습, 학습데이터 기반 진단·평가, 교육 플랫폼 서비스 등을 고도화하며 교육 방식 전반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체계는 온라인 학습 중심의 산업 구조에 머물러 있어, AI 기반 교육서비스, 데이터 활용, 플랫폼 산업 등 변화된 산업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지적을 받아 왔다.

개정안은 법률 명칭을 에듀테크(교육정보기술) 산업 진흥법으로 변경하고 에듀테크 산업의 범위와 개념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 산업통상부장관이 5년 주기로 에듀테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법무처



협력을 위한 에듀테크산업 정책협의회를 신설하도록 했다.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및 표준화 지원, 창업 활성화, 우수 에듀테크 제품·서비스 지정 제도,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등 종합적인 산업 육성 기반의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아울러 산업 전담 기관인 한국에듀테크산업진흥원과 민간 협력을 위한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지역 중소·창업기업을 지원할 에듀테크센터 설립 근거도 함께 담았다.

특히 기존 교육서비스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소프트웨어, 콘텐츠, 데이터, 플랫폼, 하드웨어를 포괄하는 산업 생태계 육성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에듀테크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진욱 의원은 “AI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기술을 능동적으로 활용하고 창조하는 'AI 네이티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교육혁신을 든든히 뒷받침해야 한다”며 “에듀테크는 단순한 교육기술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이자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출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세계무대에서 AI 교육 강국이자 에듀테크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소관 상임위원 산자중기위 위원으로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환율·물가 안정 집중... 외환 거래 규제개선 검토”

중동전쟁특위 “석유 6~7월분 확보... 핵심 원자재 수급 문제 없어”

당정은 환율·물가 안정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 대응 특별위원회는 10일 국회에서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와 회의를 열어 고유가·고환율에 따른 물가 상황을 점검했다.

특위 간사인 안도겸 의원(사진)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물가 불안으로 인한 민생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환율 안정을 위해 가능한 정책 수단을 전방위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민간 금융기관의 달러 조달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외환건전성 부담금 면제 조치 연장 등 외환 거래 규제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며 “외환시장 변동성을 확대하는 투기 거래와 환율 상승에 편승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조사·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환건전성 부담금은 외국환거래법상 금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외화부채를 보유할 때 부담금을 내도록 한 제도다. 부담금을 면제하면 외화 차입 비용이 줄면서 달러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6개월간 면제하기로 한 바 있다.

정부는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하반기 긴급 할당 관세 조치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안 의원은 “달걀 등 주요 농축산물과 식품 원재료 수급 물량을 확대하고 수급 불안 품목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강화하는 등 전방위적인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국내시장 복귀계약(RIA) 잔고가 2조6천억원을 기록하며 정책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중동 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 마련한 추경의 집행률은 5월 말 기준 70%,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99%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원유 6~7월분은 전년 대비 85% 이상, 나프타는 5~6월분이 전년 대비 85% 이상 확보됐다”며 “핵심 원자재 수급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특위 회의에서 5부제 전환에 대해 관계부처에서 검토한 뒤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